

##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제임스 베이커 3세

오늘 이 자리에서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태평양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국가들 중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 중의 하나인 한국에 와서 보니 태평양의 세기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느낌입니다.

한국의 성공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제분야일 것입니다. 1인당 GDP 7,000달러, 금년의 경우 성장률 7%,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 첨단 산업분야의 발달, 세계화의 진전 등으로 볼 때 한국은 신흥공업국들 중 선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는 세계의 여러 지역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미국, 서유럽과의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확실한 파트너이며, 그 중요성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 중에서 경제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정치,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주요한 경제세력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국제경제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개방된 세계경제체제를 강화해야

지난 2년동안 무역과 투자의 개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두 가지 커다란 난제—경제적인 문제와 경제·정치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폭풍우란 북미, 서유럽, 일본이 경기침체에 빠짐으로써 전지구적인 침체상태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고, 경제·정치적인 폭풍우는 보호주의와 자유무역간의 새로운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마도 정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금년의 경제성장률은 3%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5.8%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유럽경제 또한 회복되기 시작함으로써 올해 들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 동시에 건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기회복은 엔화의 급격한 가치상승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북미와 서유럽의 경기회복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년간 경제성장 호조와 함께 무역자유화의 노력도 커다란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요컨대 GATT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입니다. 물론 이 성과들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GATT 타결의 의미는 세계가 국제공동체로서 자유무역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있으며, 결국 선진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촉진제가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황이 명확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날 GATT의 활동이 거의 실패에 이르렀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웰링턴 공작이 워털루전투에 대해서 말했듯이 그것은 거의 실패와 '비슷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국가이익을 위해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다분히 위협하기까지 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제는 무역분쟁이 국제경제생활의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인 경기회복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회복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경우도 경제전망은 밝은 편이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감당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내년에는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져서 경기확장이 주춤할 것으로 보

입니다.

전지구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가들간의 다자간 협력전략이 필요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네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거시경제적 조정

무엇보다도 먼저 서방 선진 7개국(G7)들은 거시경제적 정책조정을 한 단계 높여 진행시켜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경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높은 이자율과 일본의 수요가 작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장기화, 심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재무장관 시절 국제통화시장의 질서를 위한 주요국가들과 정책조정을 모색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어려움을 이미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루하며 극도로 정치적인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여건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회복단계에 들어선 G7 국가들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을 지속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저 사진이나 찍고 그럴싸한 성명서만 발표한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네이플즈(Naples)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클린턴 행정부가 제시한 「시장 2000(Market 2000)」 제안같이 회의는 우왕좌왕하면서도 겉만 번지르르한 제안이 막판에 통과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은 서방경제가 두 가지 목표—즉,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자유무역을 향한 보다 강화된 약속

둘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무역을 위한 새로운 약

속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만, 보호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전후 세계경제의 번영을 가져왔던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와 기업인들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경제가 국제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서유럽 사람들에게 상호의존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생소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NAFTA와 GATT의 협상에서 그랬듯이 국제무역에 관한 결정은 다분히 국내정치에 결과입니다. 정치가들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기업의 편을 들면서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대항하는 데에는 참으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의 경험은 개방된 무역과 투자가 승자를 낳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동아시아의 경제적 '기적'이나 '태평양의 세기'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 더 진전된 자유무역과 투자는 훨씬 더 많은 승자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도 거기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국제적으로도 지금은 주요국가들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한 계속적인 협상을 벌이기 위해 기초를 다져다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음 번 캐나다의 할크스(Halifax)에서 개최될 G7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중요한 작업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는 APEC과 같은 기구가 재화,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논의해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루과이라운드는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 서방경제의 구조조정

북미와 서유럽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전세계 발전을 위한 다자간 접근의 세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업분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은 전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쟁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구조조정이 기업부문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유럽과 캐나다,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유럽은 현재 복지국가(대처수상이 乳母국가라고 불렀던)에 따른 코스트를 엄청나게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성장과 높은 장기간 실업이 그 대가인 셈이고 재정적자는 경제를 뒤쳐지게 만들고 있으며 경쟁력을 저하시켜 왔던 것입니다. 결국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적자는 일종의 병입니다. 그 병명이 바로 과대한 정부의 지출인 것이지요.

재정적자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지출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그 지출이 커졌던 것이지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서유럽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에 사회적 노동의 분업을 보다 효율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 동양의 기적에도 변화 필요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한 네번째 부분은 일본과 동아시아의 수출주도형 경제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험은 수출주도형 경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무역균형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은 국제적 긴장을 초래하고 국내소비에 실질적인 코스트를 유발합니다. 오늘날 일본은 보다 균형적인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에 의한 수출증대라기보다 일본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은 인접국가들도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때때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행속도가 느려져서 오히려 첨예한 대립과 반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시장의 개방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미국과 일본간의 협력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정부와 미국정부간의 불화가 양국에게 치명적이라거나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도 유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변화를 일본에 비해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향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남미의 나라들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극심한 소득의 불균형을 겪고 있는 않습니다. 중산층의 부상은 국내 성장요인으로 훌륭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동아시아 경제가 성숙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전체를 보면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이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스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시장을 개방하고 국내수요를 촉진할 만한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경제의 광범위한 자유화야말로 일본과 기타 이 지역의 국가들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지요.

## 경제학의 한계

전지구적 성장이 우리들간의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는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고 미국의 정책중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 지역을 둘러보면 전략적·정치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급박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소평 사후의 중국의 변화과정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자신과 이 지역, 나아가 전세계에 대해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등소평의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자유화의 결합이 단기적으로 놀랄만한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자유화가 병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기업가층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광범위한 정치적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보다 대중적인 정부형태로의 이행을 지연시키게 된다면 등소평 사후에 북경의 현체제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예상에 따르면 등소평 사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치적 후계자들의 경쟁은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막으려고 할 것이고, 통제력을 지닌 중심을 형성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적 개혁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위험한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혼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외국의 투자를 잃어버리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가 등장할 가능성입니다. 그러한 독재정권의 경우 지원을 얻기 위하여 대외적인 모험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위험한 가능성은 1920년대의 혼란이 재연되는 것일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화는 최근 중국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지역적 자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중앙의 권력이 약화될 경우 중앙권력과 갈등관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장기적인 안정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경의 대외적인 경제관계를 심화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국의 민주주의를 향해 필요하고 그것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중국이 국제공동체에서 정당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향후 극동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세계의 강국으로서 일본의 부상이 그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임에 틀림없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게는 경제적인 힘에 걸맞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인접국들은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고 진심으로 협력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민주국가로서 일본의 위치를 재점검하는 것 이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UN에서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 예를 들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특정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지 하는 것은 일본이 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힘을 쏟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그러한 역할은 40년 동안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한 안전핀으로서 미·일간에 유지되어 온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동반자관계는 현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무역분쟁은 미·일 동반자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현상은 일본이 비단 미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세계국가들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구조적인 무역흑자를 감축하려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시에 동반자관계의 다른 측면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보다 규율있는 재정정책의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역의 안보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클린턴 행정부의 협상은 위험한 완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북한을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가로 인정하는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무책임한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되었고 지역의 안보에 관해 많은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미행정부가 궤도를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협정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방공체제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한국에 대해서 안보공약을 확인하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 결론

요컨대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는 아직도 미국과 이 지역 국가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충고하고 싶은 것은 경제주의(economism)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냉전의 문제의식은 뒷전에 있고 단지 경제문제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이미 언급한 안보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경제주의가 위험한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의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새로운 TV 혹은 새로운 자동차를 선택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위의 개념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자유선거에서 투표할 권리 등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을 '서구적인 가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서간의 갈등이 끝나고 나서는 이 용어가 더 이상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사회간에는 뚜렷한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양측이 알고 있고 서로가 존중해 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를 굳게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오늘날의 전세계의 시장을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듯이 전지구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세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질의** 토마스 해리스 대사 (주한 영국대사)

우루과이라운드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직후 일방적인 조항인 통상법 301조를 발동했을 때 미국이 생각하고 있던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율이나 규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응답** 베이커 장관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일본의 시장, 특히 자동차시장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목표나 목적 혹은 쿼타 등의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관리무역이나 소송 등 일방적 제재의 개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도 현재 그 문제를 WTO로 넘기려 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WTO에 가입했다고 해서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국내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정과 절차상의 관점에서 보면 301조를 그렇게 빨리 동원할 필요가 있었을까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의 정치적 사안이 무역분쟁과 보호주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은 천사의 한 쪽 날개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제재방식에 의해 문제를 희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WTO에 가입했을 때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모두 WTO에 맡긴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대규모의 구조적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일본과 전세계는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자동차시장이 개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딜러들에게 자동차를 공급하면서 외국차를 진열대에 진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개방된 시장입니까? 관세장벽은 없다고 하더라도 비관세장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정부는 스스로가 한 일을 주의깊게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S. K. 한 (미국 시애틀 거주 교포)

카터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듯이 공화당원인 베이커 장관께서도 미국과 이 지역간의 조정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응답** 베이커 장관

현재 미국은 행정부는 민주당이, 의회는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체제로 보자면 그다지 이상한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의회제도하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4~5년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했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가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인은 클린턴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평양정책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APEC에 대해서 취한 정책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APEC의 창설에 참여했기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APEC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때 저는 대단히 고무되었습니다. 저는 APEC이 창설된 해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제2차 APEC 각료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던 때에도 APEC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미국 행정부가 하려는 일들 중에 강력히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게다가 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해 왔던 부시 행정부를 비판하였지만 실행단계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정책에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 행정부는 제가 주장하는 올바른 정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 **질의** 오세응 의원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대한민국 국회의 외무통일위원장으로서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공화당의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제네바 합의에 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응답** 베이커 장관

갈루치 대사는 제가 국무장관시절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 탁월한 공무원입니다. 그는 국무장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최고위 정책지침이 하달되면 그것을 수행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갈루치 대사가 가능한 최선의 협상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합니다만 북한과의 회담에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쿠알라룸푸르 회담이 미 행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의 의문점은 회담 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행정부는 40년간이나 지속되어온 정책, 즉 힘에 의한 대북정책을 포기한 듯 합니다. 당근과 채찍의 양면정책을 포기하고 오로지 당근정책만을 구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표현은 결국 2년전 북한이 받아들였던 국제협약을 지금부터 5년 후에 실행하도록 미국이 감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전에 북한이 받아들였던 국제협약을 5년 후에야 이행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매년 50만톤의 중

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40억 달러가 드는 경수로 건설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외교접촉과 협상을 벌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북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지난 40년간 수행해온 정책, 전쟁위협을 적절히 활용하는 정책을 포기한 데 있습니다. 전쟁위협은 실수일 지도 모릅니다. 현재 북한의 체제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컨대 북한에게는 유화정책보다 힘을 통한 정책이 더 잘 먹혀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해왔던 것은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시작한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서 이라크에 대해 취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제재조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미 IAEA가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UN 안보리에 대북한제재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국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중국도 한반도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과의 막후 대화를 통해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결합된다면 그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의 내용 중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소련이 광범위한 우위를 보여왔던 서유럽에서도 40년간이나 침략을 저지해 왔습니다. 그러한 전략적 억제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지역에서의 안보공약을 확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라도 이미 이루어진 협정이 준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다시 한번 강력한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한국과 협조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 곳에 와서 보니까 협상이 진행되는 방법과 한국의 입장반영 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듯한데, 이 점을 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의** 김 기환 박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APEC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시다시피 보고타 정상회담의 협정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2020년까지 자유무역을 달성하도록 금년 가을 오사카에서 개최될 각료회의는 보고타 선언을 이행할 계획을 만들어 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회의의 주최국이 일본이고, 또 일본이 이러한 목표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모두들 알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사카 회의에서 어떤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베이커 장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한국도 보다 공격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대단히 가치있는 목표이고 한국이 그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APEC의 다른 회원국들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갖게 되리라고 봅니다. 의장국인 일본이 작년 정상회담 협정내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APEC은 태평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이 기구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나라도 한·미 양국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이 EAEC와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EAEC가 배타적인 인상을 주고 태평양 국가들을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세기 초에 태평양을 아시아와 분리했던 경험을 연상시키는데, 그로 인해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 즉 비극적인 전쟁을 치렀던 것이지요. 동아시아국가들이 미국과 같이 자유무역 협정에 가입하고 GATT의 원칙이 준수되는 한 우리는 그러한 노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은 미국을 배제하는 무역그룹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질의** 양 수길 박사 (교통개발연구원 원장)

김기환 박사와의 문답이 좋은 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근들어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개념의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미국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를 미국-APEC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응답** 베이커 장관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이 자유무역협정이고 GATT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개념인 듯한데 솔직히 저는 그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많이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AFTA, 즉 아시아자유무역협정(Asian Free Trade Agreements)이라는 말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제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GATT와 일치하는 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서양 국가들이 AFTA에 대해 우려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을 고양시키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최 창윤 박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향후 러시아의 역할에 관한 베이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베이커 장관

러시아와 구 소련국가들의 성공적인 개혁보다 미국과 서방측에 중요한 외교상의 현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체첸(Chechnya)에서 비인도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체첸이 러시아

연방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고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도적인 문제에 관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러시아가 21개 지역으로 이루어진 연방이라는 사실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러시아가 부정부상태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체첸 문제는 러시아의 국내적 영토문제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접하는 것보다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좋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억제되고 있으며, 루블화는 안정을 되찾았고 노동력의 35%가 민간부분에 고용되어 있으며 소규모기업의 75%가 사유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문제와 정부의 통제력이 미약하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옐친과 너무 오랫동안 밀착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러한 견해에 반대하며 옐친을 지지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옐친은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누구와 협력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성공적인 개혁에는 아직도 중대한 고비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구 소련에 포함되어 있었던 나머지 국가들의 성공적인 개혁을 국제사회가 돕는 것입니다. 단지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립을 인정해야 하겠지요. 발트 3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국가들은 진정으로 러시아로 부터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같은 나라들은 러시아중심의 연합에 다시 가입한 바 있으며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가 시도할 만한 도전들이 많기는 하지만 체첸사태와 러시아의 대이란 핵무기 판매로 인해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미국과 몇몇 나라들에서는 반러시아 동맹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현재 서방의 민주적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견해들은 위험하고 우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의** 사공 일 박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베이커 장관께서는 연설을 통해 G7의 협력에 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베이커 장관께서 재직중 G7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국무장관에서 물러나고 나서 G7은 말뿐인 회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와 같은 금융세계화 시대에 멕시코 페소문제나 엔-달러 환율의 불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제환율체제, 예를 들면 변동환율대(flexible exchange rate ban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G7이 국제협력의 주체가 되는 데 따르는 정당성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IMF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답** 베이커 장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고 보다 능동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환율체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견해가 필요한 것이라거나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985년과 1988년의 시기에 재무차관 혹은 장관급이 참여하는 회의가 거의 1달에 1번씩 열려서 환율에 영향을 줄 만한 각국의 경제적 상황(fundamentals)을 조정했고, 그러한 노력은 결국 비공식적인 목표환율체제(target zone system)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환율대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것을 시행해왔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환율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시기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무역분쟁이 남아 있

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이지요.

IMF가 G7에 대항해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G5이든 G7이든 간에 주요국통화에 관한 합의의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칠 경제의 근본적 요인(fundamentals)을 조정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이 이자율을 인하한다든지, 미국이 재정적자감축을 위해 지출을 줄인다든지, 일본이 국내수요를 진작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지요. 이러한 조정은 5~7개국간에도 조정되기 힘든 것인데 IMF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모인 기구에서 해결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조정을 보다 강화하는 것,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며 환율의 안정을 위해 목표환율대가 주장하고 있는 보다 유효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입니다.